

# 건설동향브리핑

## 제481호 (2014. 10. 13)

### ■ 경제 동향

- 9월 CBSI, 전월 대비 3.7p 상승한 83.9

### ■ 정책 · 경영

- 우리나라 FTA 동향과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 안전 경영 정착으로 신뢰의 건설 문화 구축

### ■ 정보 마당

- 세계경제포럼,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 26위’ 평가

###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건축-소방 분리 시공이 화 키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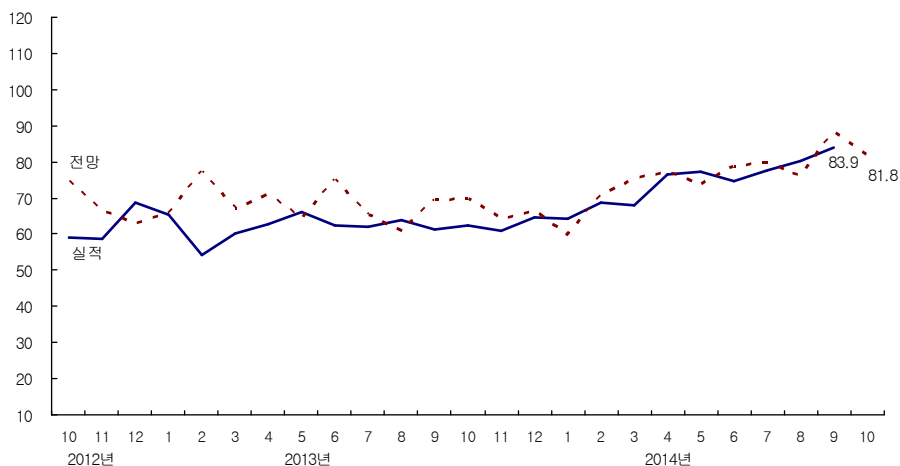
## 9월 CBSI, 전월 대비 3.7p 상승한 83.9

- 3개월 연속 상승, 4년 11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

### ■ 제2기 경제팀의 경기 부양책 긍정적 영향, 기준선(100.0)에는 미달

- 2014년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sup>1)</sup>는 전월 대비 3.7p 상승한 83.9를 기록함.
  - 이로써 지난 7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2009년 10월에 86.4를 기록한 이후 4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결국 글로벌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 SOC 예산을 전년 대비 25% 증액시켰던 200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됨.
  - 이는 지난 7월에 발표된 제2기 경제팀의 주택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경기 부양책에 힘입은 결과로 판단됨.
  - 지난 7, 8월에 혹서기로 인해 공사 물량이 감소하는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 발표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9월에는 혹서기가 끝나는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감.
  - 특히, 최근 신규 주택 분양이 활발한 대형기업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CBSI 상승을 주도하였음.
  - 단, 건설기업의 체감 경기 침체 수준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준선(100.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80선 초·중반에 불과해 여전히 침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음.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함.

■ 대형기업 지수 상승,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지수 하락

- 기업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기업 지수가 상승한 가운데, 중견 및 중소기업 지수는 하락함.
  - 대형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16.0p 상승한 108.3을 기록해 9월 상승을 견인함. 9월에 기록한 108.3은 2009년 9월(114.3) 이후 최고치임.
  - 중견기업 지수는 지난 7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해 전월인 8월에 2009년 11월(88.5) 이후 최고치인 83.3을 기록했는데, 9월에는 2개월 연속 상승에 대한 통계적 반락의 효과로 전월 대비 3.3p 하락한 80.0을 기록함.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2.9p 하락한 59.6을 기록함. 주택 경기 활성화 위주로 구성된 제2기 경제팀의 경기 부양책이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 개선에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기업 규모별 CBSI 추이>

구분	2013년 11월	12월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종합	60.9	64.5	64.3	68.9	67.9	76.5	77.2	74.5	77.7	80.2	83.9	88.5	81.8	
규모 별	대형	85.7	92.9	78.6	84.6	84.6	92.3	92.9	92.3	100.0	92.3	108.3	100.0	100.0
	중견	60.7	50.0	67.9	66.7	60.7	75.9	74.1	73.3	75.8	83.3	80.0	93.3	73.3
	중소	32.0	47.9	43.4	52.9	56.6	58.8	62.5	55.1	53.8	62.5	59.6	69.6	70.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10월 전망치, 9월 실적치 대비 2.1p 낮은 81.8 기록

- 10월 전망치는 9월 실적치 대비 2.1p 낮은 81.8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낮은 것은 10월에는 건설 경기의 침체 수준이 9월보다 다소 악화될 것으로 건설기업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이는 3개월 연속 실적치가 상승한 데 따른 통계적 반락의 효과로 보이며,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때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CBSI 추이는 「주택법」(분양가상한제 개선), 「소득세법」(주택 임대 소득 개선)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의 입법화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이흥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이승우(연구위원 · swoolee@cerik.re.kr)

# 우리나라 FTA 동향과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 FTA 효과 개별 FTA마다 달라, 주요 이슈별 접근 필요 -

## ■ 지역무역협정의 주류, 자유무역협정 · 다자간협정보다 우선 적용

-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룸. 2014년 7월 현재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 384건 중 58%(222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지역무역협정을 구분해보면, 자유무역협정 외에 서비스협정(EIA,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sup>1)</sup> 122건, 개도국 간 특혜 협정(PSA, Partial Scope Agreement)<sup>2)</sup> 15건, 관세 동맹(Customs Union)<sup>3)</sup> 26건 등인 것으로 집계됨.
-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에 WTO가 출범한 전후로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384건의 협정 중 19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7.0%에 해당하는 334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됨.<sup>4)</sup>
- 지역무역협정 중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자유무역협정은 회원국 간 상품 · 서비스 · 투자 · 지적재산권 · 정부 조달 등에 대한 과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 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일종의 특혜 무역협정을 의미
- FTA와 다자간협정의 경우, FTA 협정 체결국 간에는 FTA 협정이 우선하며, FTA에 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WTO 제 협정에 있는 내용은 WTO 협정을 적용

## ■ 9건 발효, 3건 타결, 8건 협상 중

-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에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발점으로, 이미 9건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3건의 FTA가 서명 · 타결되었음. 이 외에도 현재 한-중 FTA를 비롯한 8건의 FTA가 협상 중이며, 협상을 준비 중이거나 검토 중인 건도 7건에 이르고 있음.

1)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는 서비스 개방도 동시에 논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WTO 통계에서는 각각 FTA와 서비스 협정으로 중복 집계됨.

2) 방콕협정과 같은 개도국 간 경제 협력을 위한 지역 협정으로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24조(영토적 적용, 국경 무역, 관세 동맹 및 자유무역지역) 혹은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5조(경제 통합)의 조건, 즉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 및 서비스의 자유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3)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통합 수준이 높으며, 회원국 간의 자유 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한 공동 관세를 적용함. 일례로 MERCOSUR(Common Market of the South, 남미공동시장)을 들 수 있음.

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 현황', 2014. 7.

- 2000년대 이후 RTA의 급격한 증가세에 동반하여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추진해 나감. 이 중 가장 폭넓게 개방이 추진된 FTA는 2012년 3월에 발효된 한-미 FTA로, 지금까지의 FTA와는 달리 투자 및 서비스 분야의 규정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sup>5)</sup>을 채택하였으며, 투자자분쟁제도(ISD :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sup>6)</sup> 및 역진 방지(Ratchet) 조항<sup>7)</sup>을 규정함.

**<우리나라 FTA 추진 동향>**

진행 단계	체결 국가
발효	칠레(2004.4.1 발효), 싱가포르(2006.3.1), EFTA(2006.9.1), ASEAN(2007.6.1), 인도(2010.1.1), 페루(2011.8.1), 미국(2012.3.15), 터키(2013.5.1)
서명 · 타결	캐나다(2014.6.12 가서명), 콜롬비아(2013.2.21 서명), 호주(2014.4.8 서명, 2014.9.16 국회 비준 동의 제출)
협상 중	GCC, 뉴질랜드,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중국+일본
협상 준비 및 검토 중	MERCOSUR <sup>1)</sup> , SACU <sup>2)</sup> ,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이스라엘, 중미

주 : 1) MERCOSUR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 간의 경제적 및 정치적 협력 협정임.

2) SACU(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남아프리카관세동맹)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랜드 등 5개 국으로 구성됨.

**■ TBT(기술 장벽) · 투자 · 국경 간 서비스 거래 · 정부 조달 등이 건설산업과 관련성 높아**

- FTA의 세부 내용을 보면, 각 FTA별로 상대국의 특성에 따라 중요하게 다루어지거나 요구하는 항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각 FTA마다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모든 FTA에서 ‘건설업 등록’이 현지 주재 의무 부과 금지 예외, 또는 유보 조항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일반적으로 FTA 협정에 포함되는 내용<sup>8)</sup> 중 다수가 건설산업과 연계되어 있음.
- 이러한 FTA 협정 내용 중 아시아 국가들과 체결된 대부분의 FTA의 경우, 정부 조달이 제외되어 있으며, 인도와 체결한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동반자협정)와 중국과의 FTA에서는 인력의 이동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미국과는 조달시장의 개방이나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기술 장벽), 투자 등이 주요 사항이 되므로 각 안전별 대응이 필요함.

김민형(연구위원 · mhkim@cerik.re.kr)

5) 이는 원칙적으로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현지 주재 의무 부과를 금지하며, 합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조치들만 유보 리스트에 기재하는 방식임.

6) 이는 유치국의 정부가 ① 투자 협정상 의무, ② 투자 계약, ③ 투자 인가를 위배하여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정부를 상대로 제3의 공정한 국제 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임.

7) 역진 방지 조항이란 개방 수준을 현행보다 후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함.

8) 일반적으로 FTA 협정에는 상품 무역, 서비스, 투자, 무역 규제, 원산지 규정, 원산지 절차 및 통관, 무역에 관한 기술 장벽(TBT), 지적재산권, 정부 조달, 전자 상거래, 경쟁, 노동, 환경, 경제 협력, 분쟁 해결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안전 경영 정착으로 신뢰의 건설 문화 구축

- 최근 경영계의 화두인 안전 경영, 건설기업의 최우선 경영 과제로 삼아야 -

### ■ 최근의 안전 경영 추진 동향

-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기업들도 안전 경영에 대한 정착 노력을 증가시키고 있음.
- 2014년 5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 경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96.7%가 향후 안전 관련 투자를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전경련은 지난 6월, 안전 설비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한 일몰 연장과 대상의 확대, 공제율 상향 및 안전 경영 관련 세제 지원책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음.
  - 또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전경련 회원사들에게 안전 경영 매뉴얼의 제 정비와 사업장 내 안전 설비의 점검 및 안전 사고 대비 체계 구축 등의 캠페인 전개를 제안하기도 함.
- 건설산업의 경우, 건설 현장의 특성상 산업 재해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업 차원의 안전 경영 정착은 중요한 과제임.
  -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많은 건설기업에서는 기업의 경영 방침에 ‘안전 경영’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고유의 안전 교육 프로그램 및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 등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건설산업은 산업 재해의 발생률이 타 산업에 비해 높아 기업의 안전 활동을 유도하는 다양한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 건설기업 안전 경영의 필요성

- 통계상으로 산업 재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유독 건설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14년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3년 산업 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산

업 재해자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 제조업 재해자는 줄어든 반면, 건설산업은 2013년에 516명이 사망함으로써 전년 대비 사망자 수가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산업 재해 사망자는 전체 재해 사망자 가운데 무려 47.3%(516명 사망)를 차지하였음.
- 정부의 안전 정책 패러다임이 시설물이 준공된 후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던 것에서, 이제는 시설물의 공급에 있어 기획 및 시공 단계 등에서의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향후 건설 안전에 대한 법적인 환경은 지속 강화될 것으로 보임.

### ■ 안전 경영 확산을 위한 기업 · 정부 차원의 대응책

- ‘안전 경영’이란 경영자가 기업 경영 방침에 안전 정책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세부 지침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임직원들이 이를 실천하도록 하며, 안전 경영 계획을 중 · 단기로 세우고 이에 대한 실행 결과를 점검하는 경영임.
- 건설기업에 있어 안전 경영은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활동으로서 단순히 법적 ·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경영의 목표로서 안전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건설기업에서는 안전 교육, 안전 매뉴얼 보급 등 기존의 안전 관리 활동을 기업 전체의 경영 활동으로 끌어올려 안전 경영의 목표를 중기와 단기 단위로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적인 과제들을 도출, 시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정부는 안전 경영의 실천 및 성과에 대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 및 제도를 구축하여 건설기업들의 안전 경영에 대한 유인을 지속적으로 부여해야 함.
  - 건설기업의 경우, 안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한 세제상의 지원책들이 실질적으로 안전 관리에 대한 활동 강화로 승계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임을 인식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함.
  - 또한, 건설 안전의 실질적인 성과 향상의 유도를 개별 건설기업에 부담시키는 현행 시스템에서 정부가 건설 안전 확보에 대한 연구 개발이나, 기초적인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인프라의 건설에 지원하는 등 건설기업의 안전 경영 정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함.

김영덕(연구위원 · ydkim@cerik.re.kr)

# 세계경제포럼,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 26위’ 평가<sup>1)</sup>

- 혁신 주도형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조치 필요 -

## ■ 우리나라, 세계 144개국 중 글로벌 경쟁력 26위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2014년 9월 3일에 발표한 ‘2014년 국가 글로벌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혁신 주도형 국가로 분류된 가운데, 144개 국가 중 전년도 대비 1단계 하락한 26위를 기록함.
  - 우리나라는 2007년에 11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차지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위권 이내 진입에 계속 실패하고 있음.
- 기본 요건 부분의 평가 순위는 전년과 동일하지만 효율성 증진 부문과 혁신 및 성숙도 부분의 평가 순위는 2단계 하락함. 세부 부문별 경쟁력 수준은 상당한 편차를 보임.
  - 사회 기반 시설(14위), 거시 경제 환경(7위), 시장 규모(11위), 혁신(17위) 등은 종합 순위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 반면, 제도(82위), 노동 시장의 효율성(86위), 금융 시장 개발(80위) 등은 종합 순위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됨.



1) 본고는 세계경제포럼이 2014년 9월 3일에 발표한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15, www.weforum.org)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 것임.



■ 스위스 6년 연속 1위, 싱가포르 2위, 미국 3위

- 국가별 글로벌 경쟁력 순위는 스위스가 1위, 싱가포르가 2위, 미국이 3위, 핀란드가 4위, 독일이 5위를 기록하고, 아시아에서는 3개 국가가 10위권 이내에 진입함.
  - 일본과 홍콩이 각각 6위와 7위를 차지함.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 등은 10위권 밖으로, 각각 14위, 24위, 26위, 28위를 기록
- 스위스는 6년 연속 1위를 수성하고 있는데, 일류의 혁신가를 양성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 기관, 높은 R&D 투자 수준, 견고한 산학 협력 체계 등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됨.
  - 사회 기반 시설, 교육 체계, 시장 지배, 노사 협력, 인재 유치 및 유지, 금융 서비스, 혁신 역량, 기업의 R&D 투자, 국제 특허 등이 부문별 평가 순위 1위를 차지
- 싱가포르는 사회 기반 시설, 고등 교육 및 훈련, 상품 시장과 노동 시장의 효율성, 금융 시장 개발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4년 연속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함.
  - 세계 최고 수준의 도로, 항만, 공항을 보유하며 사회 기반 시설 평가에서 2위를 차지

■ 정부 제도의 경쟁력은 낙제 수준, 사회 기반 시설의 경쟁력은 하락세

-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이 적용한 114개 세부 평가 항목 중 16개 항목에서 100위권 밖으로 평가되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정책 입안의 투명성(133위), 노사 관계 협력(132위),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126위), 은행의 건전성(122위), 대출의 용이성(120위), 시장 지배력(120위) 등은 144개 국가 중 최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취약한 분야로 꼽힘.
- 우리나라의 사회 기반 시설은 타 부문에 비해 강점으로 평가되지만, 2013년보다 3단계가 하락한 14위를 차지함으로써 경쟁력 회복을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도로 시설 (15위→18위), 철도 시설(8위→10위), 항만 시설(21위→27위), 항공 시설(22위→31위), 전력 공급(39위→44위) 등 개별 시설의 품질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 기반 시설의 확충이 곧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스위스와 싱가포르의 사례와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는 국내 사회 기반 시설의 품질 저하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함.

김원태(연구위원 · wontkim@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0. 6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자분쟁조정심의위원회 주최, '제89차 소위원회'에 건설관리연구실 이영환 연구위원 참여</li> <li>- 분쟁 조정 심의 등</li> </ul>
10. 8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제도와 주최, '공사손해보험제도 개선 관련 TF'에 건설산업연구실 이의섭 연구위원 참여</li> <li>- 공사보험제도 개선 방안 협의</li> </ul>

■ 제25차 한일건설협력협의회 총회 참여

- 연구원은 대한건설협회와 일본 해외건설협회가 지난 10월 2일에 공동 주최한 제25차 한일건설협력협의회 총회에 한국 측의 주제 발표자로 참여함.
- 한국 및 일본 건설기업 CEO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실장이 '국내 건설시장 및 해외 진출 동향'에 대하여, 건설관리연구실 이영환 연구위원이 '안전한 도시를 위한 생활형 인프라 정책'에 대하여 각각 주제 발표를 하였음.

■ 2014년도 연구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일자 및 장소 : 2014. 10. 23(목), 역삼동 소재 중식당 루안
- 기획 의도 : 2014년도 연구원 사업 실적 및 2015년도 연구원 사업 계획(안)에 대해 업계 연구 자문위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자 기획하였음.

■ '민간투자사업 추진 전문 과정' 모집

- 일정 및 장소 : 2014. 10. 28(화)~30(목), 21시간,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9층 연수실
- 대상 및 참가비 : 건설기업 민간투자사업 실무자, 유관기관 및 단체 등, 450,000원/인
- 공통 사항 : 본 연구원은 노동부 지정 교육 기관으로, 고용보험 납부 사업장의 재직자일 경우, 교육비 중 일부가 환급됨(우선 지원 대상 기준, 30% 내외).
- 문의 : 기업지원팀 교육 담당(Tel.3441-0691, 3441-0848)

■ 「2015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4. 11. 4(화) 14:00~17:00,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문의 : 기획지원팀(02-3441-0883, 0896) ※ 사전 등록 필수

## 건축-소방 분리 시공이 화 키운다

건설 분야는 재해 방지가 매우 중요한 업종이다. 건축물에서 화재 등 대형 재해에 대응하려면 각종 기계 설비 및 전원, 조명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중앙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화수와 비상 전원 등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필요하다. 또, 스프링클러, 소화기,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경보 설비, 등과 같은 소방 설비는 대부분 전기 배선이나 급수 배관과 연계가 많다. 또, 방화 셔터나 방화문 설치 구획, 배연 시설 설계가 잘못 되었을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업에 소속된 건축 엔지니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초고층 건축물이나 대형 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초고층 건축물은 외부 소방력에 의한 화재 진압이 거의 불가능하며, 15층 이상은 고가 사다리차의 작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축 계획적 측면에서 중간 대피층을 신설하거나, 소방 전용 엘리베이터의 설치, 긴급 환기 설비의 도입 등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소방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시공 단계에서 건축공사와 설비 배관, 전기, 소방 설비 업체 등이 상호 긴밀히 연계하여 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서로 분리하여 별도로 시공한다면, 공종 간 연계성이 나빠지고, 책임소재가 분산되면서 소방 안전이 취약해질 우려가 매우 높아진다.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은 소방 시설 공사의 분리 발주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 사유로서 2013년 점검 대상 건물의 40%에서 소방 시설이 불량했으며, 1만 2,000여 건의 화재중 소방시설이 미작동한 사례가 20%에 달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소방시설 부실의 원인으로서 저가 하도급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방 시설 업체의 기술력 부족이나 부실 시공 관행, 그리고 소방방재청의 관리 소홀을 역지로 외면하고 하도급 문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급수전이나 스프링클러, 화재 감지기 등 소방 설비는 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소방 설비 공사는 1~2인의 기술자로 운영되는 영세 업체가 대부분이며, 기업의 10년 존속률이 15% 내외에 불과하다. 결국, 소방 시설 공사의 분리 발주는 장기적으로 하자 보수 책임자만 사라지게 만들 우려가 높다. 따라서, 소방 공사의 분리 발주 논란을 단순히 건설기업이나 소방 시설 업체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나 건축주, 소비자의 입장에서 효용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즉, 소방 안전을 위해서는 적정한 공사비 이외에 하자 책임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통합 시공이나 중앙 통제형 방재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머니투데이, 2014. 9. 18>

최민수(연구위원 · mschoi@cerik.re.kr)